



쌀과 식용 콩만이라도 자급해야

정부·국민 모두 식량안보에 둔감 ... 10~20년 내에 식량위기 닥칠 수도

장원석 이코노미스트 기자 ubiquitous83@joongang.co.kr

사진:이철호 기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식품산업 육성책 등 식량안보 분야를 다루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2010년 이사장을 맡은 이철호 고려대 식품공학부 명예교수가 사재 1억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그는 40년간 식품을 연구한 원로 식품학자다. 2010년부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으로 일하고 있다. 미국식품공학회(IFIT) 펠로우(Fellow)에 선정됐을 정도로 국내외 식량 사정에 밝다. 지난해에는 식량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소설 『식량전쟁』을 펴냈다. 이철호 이사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다가올 식량위기에 너무 둔감하다”며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상하지 못한 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설 『식량전쟁』에서 10~20년 내 전 세계적인 식량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지구의 식량생산 증가율은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 잉여의 시대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부족의 시대는 대립을 초래한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수출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수입국이다. 세계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경제가 성장할수록 식량이 더 필요한 중국 사이에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식량을 패권 다툼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급격한 인구 증가도 부담스럽다.”

한국이 식량안보에 취약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 사먹는 게 더

싼데 굳이 우리가 생산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 몰라서 하는 얘기다. 유사시에 식량 수입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립도 심상치 않다. 만약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생긴다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 있겠나? 인간이기 때문에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먹는 것은 걱정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적어도 쌀이나 식용콩 정도는 자급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왜 쌀과 식용 콩인가?

“쌀밥 한 그릇에 콩나물과 두부, 여기에 된장찌개만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한끼 식사 아닌가? 쌀은 한때 자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다시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몇년 간 우리 정부는 쌀이 남아도니까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쌀은 남겨서 비축하고 이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생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 식용콩은 국내에서 약 연간 40만t 정도가 소비되는데 국내 생산량은 15만t 정도다. 조금만 노력하면 식용콩 정도는 얼마든지 자급할 수 있다.”

이 이사장은 평소 남는 쌀을 비축해 남북한 통일 시대의 식량안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서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에서 그는 통일이 될 경우 연간 약 100만t의 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매년 60만t씩 2년간 비축해 통일에 대비하자는 주

장이다.

통일 시점은 가능할 수 없다. 2년이 지나 남은 쌀은 어떻게 하나?

“2년이 지난 쌀은 가공용으로 싸게 공급하면 된다. 국내 식품기업 CEO들을 만나보면 쌀 가공산업에 관심은 있지만 공급이 불안정해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2년 비축 후 방출'을 제도화해 매년 꾸준한 양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면 기업도 쌀 가공 분야에 뛰어 들 수 있다. 쌀빵이나 쌀국수 같은 쌀 가공식품 시장을 키우는 것은 식량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식량안보를 지키는 양대 축이다.”

식량안보와 식품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미 밥만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 농수산업이 생산하는 식량은 전체 식량 수요의 절반 정도다.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한다. 국민의 먹거리 중 반 이상은 식품기업들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가공해 시장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식품 안전은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지나친 불신으로 식품기업들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 주는데 가족이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타박만 해서야 되겠나? 최근에는 우리 식품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네슬레와 같은 세계적인 식품기업을 육성해 유사시에 해외 식량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

“바른 식량정책은 농수산업과 식품이 두 마차기 이끌어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식품이 빠졌다. 전 세계 어디에도 축산은 부의 명칭으로 쓰는 나라는 없다. 농업의 일부분인 축산은 별도로 내걸면서 정작 중요한 식품은 빼버렸다. 2010년 기준으로 음식료품제조업 매출액 규모는 62조원에 달한다. 외식업 매출까지 합하면 133조원이다.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산업 분야다.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농업만큼 중요한 것이 식품산업이라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지만 식약처는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는 기관이 아니라 안전 관리를 하는 곳이다.”

미국 카길 등 곡물 메이저가 전 세계 곡물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밀이나 콩 등 곡물을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사들일 것인가를 생산 못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해외에서 독자적인 곡물유통시스템을 구축하려면 30~40년 걸린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독자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는 미국 농민들과 직접 거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적인 곡물 에이전트사도 있다. 최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해외농산

물 유통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전문가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일본은 미국 시카고 곡물시장 등에 인력을 파견해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했다. 한번 파견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당연히 스스로 노력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나라도 1980~90년대 정부나 기업에서 인력을 파견했지만 당시 떠나는 사람에게 '꼭 쉬다 오라는' 인사를 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이었다. 게다가 돌아와서는 다른 일을 하니 업무 노하우가 전수되기도 어려웠다. 2년 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 독자유통망 확보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돈을 써보지도 못했다. 일을 제대로 처리할 전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3~4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18대 대선 과정에서 '식량안보'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다른 이슈에 밀린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부처 내에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없는 게 문제다. 행정가들이 고민하지 않으니 정치인도 무관심하다. 우리나라 농림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식량자급률이란 단어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식량자급률 관련 정보와 통계가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이다. 시각 자체가 아예 다르다. 2009년 농림부가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했다. 당시 27% 정도였던 곡물자급률을 2015년 25%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세상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목표치가 어디 있나?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해 곡물자급률을 2015년까지 30%, 2020년에 32%로 끌어올리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실행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아직도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국민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

“10~20년 내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산 정체와 소비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다. 쉽게 생각하면 된다. 인구 10억명이 넘는 중국이나 인도의 육류 소비량이 갈수록 늘어난다. 지금은 굶는 인구가 많지만 잘 먹고 육류를 많이 찾지 시작하면 전 세계의 곡물은 아마 소와 돼지를 키우는 데만 써도 모자랄 것이다. 하루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먼저 식량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30~40대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먹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일인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한다.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남기고 버리지 않나? 식량안보는 식량이 귀하다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